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우선배치 촉구

전국혁신도시협, 우석대서 긴급 임시회 · 공공기관 2차 이전공동성명서 발표
유희태 회장 "혁신도시 성공적 안착 도모 후에 전국 확대 이전 마땅" 주장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30일 우석대에서 긴급 임시회를 갖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 우선배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완주군과 전남 나주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낀 11개 기초단체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혁신도시 우선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30일 오전 우석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긴급 임시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방향을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혁신기능 수행을 위해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이날 "국토부가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혁신도시 활성화가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혁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타 지역이나 원도심의 활성화 계기로 이용된다면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해온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지방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현재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원도심과 이를 잇는 도시개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대상에 혁신도시를 우선배치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서 발표에는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울산 중구, 제주 서귀포시,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 대구 동구, 전남 나주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단체가 함께 했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과 공동 목표달성, 상호협력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 11개 기초단체가 구성돼 지난 2006년 12월에 설립됐다. 제15기 임원으로 유희태 완주군수가 회장을 맡아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부회장에는 전남 나주시장과 충북 음성군수가 활동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

올해부터,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신청 가능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 2월 중 실시

전북도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기간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종전에 직불금 신청·접수 후 지급 대상 적격요건을 검증하던 방식을 개선했다. 이제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지급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한 달간이다.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문자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임에도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등이다.

공익직불금은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5~10%(최대100%)가 감액될 수 있어,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 경우 12만 5천여 농가에 3,09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돼 농민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지사 "새로운 전북 로드맵, 올해 열매 맺도록"

'1월 소통의 날 행사' 개최
다양한 특강 · 공연 교육 진행

김관영 도지사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향한 의지를 담은 도민의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임동창 작곡가와 임미성 작사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1월 소통의 날 행사에서 올 한 해 혁신에서 성장으로 대전환 속도를 높이는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라북도는 30일 '1월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김관영 도지사가 900여 명의 도청 직원들과 함께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고 △명사 초청 특강, △전북의 새로운 미래와 꿈을 담은 도민의 노래 '전북아리랑' 공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 지사는 "우리가 항상 중심을 잡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난해 디자인했던 함께 혁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여러 로드맵과 프로젝트들이 올해는 곳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에게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작년에 통과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감 또한 무겁다"며, "어떤 특례 규정을 우리가 법에 담아서 전라북도를 변화할 것인지 모든 청원이 도민들과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 특례 규정을 발굴하는데 꼭 앞장서 달라"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김 지사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도 잘 치러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은다면 이런 일들을 무난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명사 초청 특강에서는 정갑영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前 연세대학교 총장)이 강사로 나서 '2023년 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정 회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갈등 등 전후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큰 위기에 빠져 있다"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생태계 복원,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친일 잔재 논란으로 새롭게 만든 전북 도민의 노래 제정 경과보고, 작곡·작곡가(작곡-임동창, 작사-임동창·임미성) 감사패 수여, 제작 취지 설명 및 노랫말 풀이에 이어 '전북아리랑' 공연(명창 방수미) 등 새로운 전북 도민의 노래를 도민에게 처음 선보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체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기획부장이 강사로 나서 특별자치도법 주요내용, 출범 준비 일정, 특례발굴 등 핵심 주제인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매월 개최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통해 전 직원이 도정현안을 공유하고, 분야별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전문가적 역량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도, 식품 취급시설 음식 위생 집중단속

내달 10일 까지 단속… 스키장 · 눈썰매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대상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내 식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위생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스키장과 눈썰매장에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7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상 단속대상업소 외 시설 주변의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교육을,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겨울철 식중독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에서도 생존하며,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이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이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며, "겨울철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세무조사 시기 법인이 선택"

전북도, 법인의 부담 완화 위해 '시기선택제' 도입
비과세 · 감면 받은 부동산 등 사례별 조사 추진키로
코로나19 특수로 호황 누린 골프장 28곳 대상
상 · 하반기 조사… 클럽하우스 개보수 등 현황 확인도

전북도는 도내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북도는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올해 분기별로 도내 9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도는 올해 세무조사에 있어 법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 부담이 적은 시기를 법인이 선택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여기에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 및 누락신고 사항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차량 등이 법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조사도 분기별로 추진한다.

최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세금을 감면받은 뒤 의무 사용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 등을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 매각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정당 목적 미사용 시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특수로 호황을 누린 도내 골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조사에 나서 클럽하우스 개보수, 골프카 취득현황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법인조사 15억원, 사례별 조사 86억원, 기획조사 2억원 등 총 103억원을 추징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에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고용 · 노동분야 국비 확보 나서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 노동부 차관과 면담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 지원 등 요청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30일 고용노동부를 찾아 전북 주요 사업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역 내 고용안정과 산업재해 안전망 확충 등 고용·노동 분야 신규 국가예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올해도 신규사업 억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활동으로 부처단계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30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권기섭 차관과 면담을 갖고 고용·노동분야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신규사업 3건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북권역 산업재해 근로자 치료 및 재활 전문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권역 산재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타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요양재해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산재 전문병원이 부재한 전북권역의 산업재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내년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시행을 위한 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정책적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사업·활동을 전담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설립을 계획 중인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고용인력 안정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 사업은 현재 고용노동부의 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2월 초 심사를 거쳐 2월 말 공모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전북도는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발굴된 사업의 국가사업으로 추진 필요성, 우리 지역의 적합성 등 논리를 구체화해 부처 예산 편성 본격 시작(4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는 한편, 도-시군-정치권의 공조로 부처예산안 편성단계부터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